

●●● 조 정 래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양계산업 발전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 FTA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계부분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양계농가들 또한 그 대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양계담당 조정래 사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바라보는 양계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조정래

1986. 2 국립경상대학교 농과대학 학사
2007. 8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석사
2007. 2- 현재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2003.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1994. 농림부 축산정책과 주무관

양계담당 조정래 사무관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은 1986년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4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유통과(현 축산물위생과) 등을 두루 거치면서 올해 초부터 축산경영과 양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4년 양돈 의무자조금 사업 발족 당시에는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 당시에도

처음 발족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는 등 축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성사시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래 사무관은 올해 2월부터 양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양계산업에 신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사무관은 부임하자마자 처음 맡게 된 업무는 AI피해농가 지원대책으로 AI가 종식되기 이전인 그 당시 '어떻게 하면 AI를 빨리 청정화시킬 것인가?' 일념 하나로 AI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본격적인 양계업무에 돌입했다.

물량과잉으로 업계 불황 지속

조정래 사무관은 계속되고 있는 불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과잉이 지속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불황이 예상된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수감축과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육계에서는 지속적인 원종계와 종계의 과잉공급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도 육계산업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원종계 수입업체들과 1차·2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당초 원종계 수입물량을 19만수에서 16만수로 일부 줄일 수는 있었지만 원종계 수입적정물량은 10~12만수로 볼 때 아직까지도 4~5만수가 과잉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육계산업도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란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되는 생산비 통계를 보면 수년간 생산비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산란계 역시 사육수수가 소비보다 많은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상태로 하루빨리 사육수수 감축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 연료로 인한 곡물수요 증가로 앞으로 국제곡물가격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면 더 많은 농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생산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함을 전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전업농 대상 실시

국내 축산업계 상황을 보면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EU라든지 여러 국

가들과 FTA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3만수 이상 규모의 전업농가들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육계·산란계 모두 상시사육 3만수 규모이상을 전업농가로 보고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3만수 규모이하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진입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만수 이하의 전업농가가 아닌 부업농가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진입한 농가의 경우 이미 FTA 등의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뛰어난 농가이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축계열화, 계란집하장 지원, 등급판정시설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과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계DB사업 전산화 추진

가금수급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계DB사업은 종계DB체계를 개선시켜 지속적으로 DB가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종계DB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입력을 현장출장 조사 방식에서 이제는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가의 직접입력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조 사무관은 종계업계 종사자들이 종계DB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조 사무관은 "정부에서는 농가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산업자체를 농가 스스로 포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생산자 스스로 앞

서나가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했다. 한편 전산화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농가의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종계DB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미 관리대책 방안 검토

조 사무관은 백세미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에 있어 백세미의 경우 종란은 아니지만 번식에 제공되는 알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부화될 경우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종란을 생산하는 농장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고시인 ‘종계장·부화장방역요령’에 백세미 알도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계용으로 사용되는 백세미가 상황에 따라 장기간 사육되어 토종닭으로 둔갑, 판매되는 문제에서도 정부가 백세미의 사육기간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위생과 질병방역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토종닭에 대한 개념정리를 통해 둔갑판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도입,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조 사무관은 의무자조금 시행에 있어 거출기관이라는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 산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강조한다.

생산자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조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출기관은 그 차후 문제라는 것이다.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농가들은 과연 ‘자조금이 무엇인지, 왜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선 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의식수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닌 간접적인 투자라는 점을 알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조금을 통해 우리의 양계산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함으로서 자신이 생산한 양계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 농가들이 가져주길 바랐다.

자조금사업은 임의 자조금으로 육계는 20억 산란계는 6억정도의 규모이지만 소비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우리 농가들의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아울러, 조 사무관은 2003년과 2006년에 발생한 AI로 인해 우리 양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금년 6월 AI 청정화 이후 우리 양계산업은 이제 겨우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AI가 재발된다면 더욱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리 | 기영훈 기자)